

地方自治團體의 立場에서 본 教育施設의 複合化 推進에 대하여

Mixed-Use Propelling of School Facilities on Local Self-Government

金 孝 洙*

Kim, Hyo-Soo

1. 서 론

상업·업무·주거 등이 고루 분포되고 집적되어 있는 수도 서울의 모습을 사람들은 콘크리트더미를 조밀하게 쌓아놓은 삭막한 도시로 표현하고 있다.

밀집된 공간을 도시계획이라는 틀을 이용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이다.

그중에 도시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학교시설(초·중·고·대학)은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는 7~8세부터 23~24세까지 16년간 사회인이 되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여 왔고 어느덧 \$10,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교육받을 욕구 뿐만아니라 후생·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인 학교시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시설로부터 주민의 참여 충족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학교시설의 입지, 넓은 부지면적, 학교의 기능등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초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2. 학교시설의 입지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유사 이래 계속되어져 왔지만 나름대로 교육의 틀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약 100년전부터가 아닌가 싶다.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이 형성되었건 아니면 생활의 중심에 교육시설이 들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동안 교육시설의 입지는 주거행태 및 도시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 군소 도시의 경우는 행정구역인 읍·면을 중심으로 교육시설이 분포되었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지역단위에서 점차 광역단위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이 도시 전체를 지역별 구역별 등의 분포형태를 갖게 되었다.

오랜세월 거의 같은 위치를 지켜온 학교의 입지는 사람 동선을 모이게 하였고 지역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잡아 왔다.

시설규모가 약 1,500~3,000평으로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매우 넓은 땅으로 누구나가 토지

* 서울시 월드립 건설단 건축 담당관

이용의 효율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생활권의 중심위치로서의 가치는 더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시설의 입지를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온 학교와 학생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을 참여 시킬 수 있는 학교시설을 그 지역 단체장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3. 주민의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

주민 소득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물량위주에서 질적향상으로 이동함에 따라 1차적으로 의·식·주의 질을 높였으며, 2차적으로는 개인의 취미·여가 문화, 복지에 대한 참여욕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서관, 문화회관(구민회관), 복지관, 노인회관, 스포츠센터 등 사회·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자치단체장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상기 시설들을 구청별 대략 1개소씩은 보유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에는 구별 경계내에서도 지리적 안배에 의한 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민선 자치단체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민요구에 맞는 시설을 건립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자원

서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구청)의 주요 세원을 살펴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등으로 구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물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교부금을 합치더라도 넉넉치 못한 것이 사

실이다. 성동구의 예를 들어보면 1년 총예산이 약 1,200억원 내외로 그중에서 경상비 지출이 60~70%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가용재원은 약 300~500억원/년이며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도로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와 상·하수도 및 도로등에 대한 일부 신규투자이고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주민 복지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동구의 경우 주민 복지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100억원/년 안팎일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투자할 수는 있겠으나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구 소유의 토지를 찾아 내어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구유지란 토지형태나 규모면에서도 형편없을 뿐 아니라 특히 주민 접근성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선뜻 시설투자하기가 아까울 정도이다.

또한 시로부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립부지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접근성이 불편하여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비 투자요청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주차단속으로 인해 매년 20~3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성동구의 경우 지금까지 약 130억 정도 주차특별회계예산이 비축되어 주차장 시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마저 토지 매입에 다른 부담으로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 투자를 위한 區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용 가능한 특별회계 예산등을 활용하여 주민복지시설 투자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규모가 비교적 큰 토지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구 재정 여건은 교육부가 전국 학교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형편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학교시설투자는 대부분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등에 사용되고 아주 노후한 학교시설을 새로 신축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5. 교육시설과의 지방재정 접목방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등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전면 신축은 매년 일부만이 투자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축되어지는 학교시설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설투자를 함께 생각해보는다면 이는 궁합이 잘 맞는 현상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학교로서는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을 갖출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학교시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컴퓨터교실등 특수교실을 주민과 공유 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복지시설인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은 학생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지여건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밀집지역에서 학교시설과 함께 지역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토지 및 시설의 이용 효율이 극대화되며 학교운영에 주민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가 선생님과 학생들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중심 시설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Community)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